

“한국당 해산” 청원 150만 돌파... 靑 답변에 정계 촉각

장외투쟁·정부입법 발목 등 골자
국민투표 진행중... 22일 청원 종료
정용기 의원 “청와대서 청원 조작”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50만 명(1일 오전 10시 기준 147만명)을 육박했다. 150만명이 육박하는 국민청원은 역대 최대 국민청원이다. 앞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청원이 119만 2000명으로 최대 청와대 국민청원을 기록했다. 청와대는 20만명의 국민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가 이번 한국당 해산 청원에 대해 어떤 답을 할지 정계의 촉각이 곤두섰다.

우선 한국당 해산 청원은 지난달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유한국당 해산 관련 청원 화면.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일주일만에 이 게시물에 2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나아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놓고 한국당이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자 1000만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참했다. 한국당 해산 청원에 참여하는 국민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한국당 해산

청원 종료일은 오는 22일이다. 이 청원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 입법을 발목잡기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한다”는 게 골자다. 정계 일각에서는 한국당 청원이 역대 최대 청와대 국민청원을 기록하자 다양

한 분석을 내놓았다. 그중 국민들이 현재 한국당을 바라보는 인식이 수면 위로 표출됐다는 해석이 눈에 띈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당 해산이)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국민 인식과 의식을 표출한 것”이라며 “여론화 작업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실제 정당 해산 절차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판단 아래 절차대로 진행된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확률은 희박하다는 얘기다. 더욱이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후 최초로 진행된 정당 해산은 2013년 11월 청구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전부다. 이후 현재는 2014년 12월 헌정 사상 최초로 통합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한국당은 본인들이 직면한 청원과 관련해 애써 부인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 때 “8840만건의 댓글조작, 여론조작으로 집권한 자들이 이제는 ‘청원조작’을 하고 있다”며 “한국당 해산 청원에 100만명 이상 참여했다고 한다. 그중 14만명 이상이 베트남에서 접속했다. 지금 청와대 안에서 청원 조작을 지휘하는 이들은 누구인가”라고 했다.

다만 정 정책위의장 발언은 주장에 불과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 정책위의장의 발언이 있던 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달 29일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베트남이 0.17%가 나왔다. 3월 한달간 트래픽 분석 결과, 베트남에서는 3.55%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패스트트랙’ 후유증... 국회 냉기류 장기화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등 거쳐
5개 법안 최대 330일 이후 본회의

여야 4당의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는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법안이 각당 추인에 이어 패스트트랙 가결로 2차 관문을 통과한 가운데 본회의까지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국회 의안시스템에 따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5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은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정당별 전체 득표율에 따라 이를 배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렸다.

공수처 관련 법안 2건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두 공수처 안이 지정한 고위공직자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운영위원장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백 의원의 공수처 설치법은 재직·퇴직 모두 대상으로 하지만, 권 의원의 법률안은 현직만 대상으로 한다. 또 백 의원은 범죄 대상을 ‘공직자 범죄’로 정했지만, 권 의원은 ‘부패범죄’로 명시했다. 두 법안 모두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변호사법 등이 적용되지만, 부패범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추가 된다.

또 백 의원이 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2018년 법무부와 행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을 특별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 법안은 최대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간 논의를 거친 후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대 330일 간의 논의 기간을 거친다. 특히 선거제 개편안은 내년 4월 있을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석대성 기자 bigstar@

농식품부, 식품 기술이전 협의체 발족

대학·연구소 등과 상호연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식품분야 기술 혁신 지원을 위해 대학·연구소 등 기술보유기관과 거래·이전 지원 기관이 참여하는 ‘식품 기술이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1일 밝혔다.

협의체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하게 되며 식품기술 거래 관련 기관들의 상호 연계를 강화해 식품분야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지원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협의체에는 식품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소 등 약 20개 기관,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식품기술 전달기관, 투자기관 및 보증기관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대학·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식품기술(특히)을 확보해 관련 전문가들이 사업성 높은 우수기술을 발굴 및 선별하며 해당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식품기업에 거래·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되면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협의체에 참여한 지원기관들이 각종 법률 지원, 기술 보증, 정부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기술을 이전 받은 식품기업의 기술정착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세종=최신웅 기자

해수부, 노후·유휴항만 재개발 수립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착수

해양수산부는 전국의 노후·유휴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 수립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서 기존 기본계획 대상항만에 대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기능적 노후화·유휴화 정도, 개발 잠재력, 지역사회의 실행의지,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만별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등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60개 항만 중 선정 기준에 따라 최종 대상항만을 결정하며, 항만과 주변 도시를 연계한 지속가

능한 개발 및 이용계획을 수립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등과 연계된 부처 간 협업과제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올해 기초자료 조사를 시작으로 항만별 기능분석을 통한 노후·유휴화 정도를 판단해 대상항만을 선정하고 토지이용 기본구상, 사업성 분석을 실시한 후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2020년에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특히, 항만도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입안부터 사업단계까지 시민단체·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가 참여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상상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피해 종합복구계획 당정청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산불피해 복구비 1853억 투입

당·정·청, 종합복구계획

당·정·청이 1일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등에 총 복구비 185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야당을 향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강원도 산불피해 종합복구계획’을 논의하며 같이 말했다.

이번 지원금은 산림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전에 초점을 뒀다. 예산은 화재로 소실한 주택과 농업시설 등을 복구하는

데 중점적으로 쓸 예정이다. 또 주택 철거에 9억원, 임시조립 주택 설치비에 110억원을 지원한다. 임시조립 주택 설치에는 이재민 566가구 중 이곳에서 거주 하길 희망하는 340가구의 5월 입주목표를 했다.

당정은 재난 추경안 940억원 역시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조성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복구 지원비 1853억원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